

# 후보자 전과 기록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19~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송병권 | 한양대학교

윤지성 | 서울대학교

본 연구는 후보자들의 전과 기록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제19대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후보자들의 전과 기록은 당선 확률을 약 5.6~6.7퍼센트가량 낮추고 후보자의 득표율을 약 2.3퍼센트~7.9퍼센트 정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유권자들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의 자질을 고려해서 투표 선택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제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정보 공개, 전과 기록, 후보자 자질, 투표 선택

## I. 서론

2016년 9월 28일부터 일명 '김영란법'으로 통칭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여러 시행 세부 사항들에 관해서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국회에서 갑론을박을 벌이며 세간의 이목을 끌어들였다. 이처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이 법이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이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의 정치 문화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일 것이다. 이 법의 시행은 한국 사회에 청탁과 도덕 불감증에 대해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시발점으로서 공인이 갖춰야 할 도덕성에 대해서 새로운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다. 특히 이 법을 제정한 주체인 국회의원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논란이 일었는데,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공익적 목적의 민원만을 제외할 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국민들이 국회의원에게 기대하는 도덕적 요구 수준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선거는 대의 민주주의에서 핵심적인 제도로서, 이러한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유권자에 대한 선출된 대표의 책임성(accountability)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대의 민주주의에서의 책임성은 후보가 유권자에게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유권자에게 지지를 획득하는 전망적 투표(prospective voting)와 후보의 과거 실적에 대해서 유권자가 평가하는 회고적 투표(retrospective voting)에 의해서 구체화된다. 이중에서 회고적 투표는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보상과 처벌 메커니즘을 구현하는 것으로서, 유권자들은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좋은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 그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좋은 후보’의 조건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후보자의 도덕적인 자질은 최소한의 요건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후보자 정보공개 제도는 유권자가 도덕성의 측면에서 후보자의 자질을 판단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의 병역사항, 재산 내역, 세금 납부 실적, 전과 기록 등 정보공개가 실시된 이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까지 후보자 정보공개가 확대되었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선거공보에 후보자의 정보공개 자료를 추가해서 유권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했고, 누구나 그것을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에 선거기간 동안 선거공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부터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의 게재를 의무화함으로써 유권자의 편의를 돕는 방향으로 후보자 정보공개 제도가 개선되어 왔다. 또한 전과 기록도 2014년 제6대 지방선거부터 금고형 이상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예비후보 등록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보공개를 하도록 제도를 확대 적용했다. 이렇게 후보자 정보공개로 인해서 후보자의 학력, 재산, 납세실적, 병역, 전과 기록이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자질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후보자 정보공개가 제도적으로 확립된 이후 벌써 5번의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지만, 후보자 정보공개 제도가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이 아직까지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후보자의 자질이 한국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후보자 정보공개 항목 중 전과 기록에 주

목하여 유권자들이 후보자 정보공개를 참고해서 후보자들을 선택하는지를 살펴본다. 물론, 후보자의 전과 기록이 도덕성에 대한 완전한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가 법을 어겨서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해당 후보자의 입법가로서의 자질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해 줄 수는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전과 기록은 후보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효과는 선거 당락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득표율의 관점에서 볼 때 정당의 의석 분포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이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한국 선거연구에서 지역주의와 정당일체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한 취급을 받았던 후보자 요인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앞으로 한국 선거연구가 후보자의 자질에 주목해야 함을 시사한다.

## II. 이론적 배경

유권자들의 투표 선택에 대해서는 여러 관점들이 존재하지만, 유권자들이 선거 후보자의 자질을 판단하는지에 관해서는 미국 정치학계에서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 연구들은 주로 회고적 투표의 관점에서 부패와 관련된 추문(scandal)이 현역 의원들의 재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기존 연구들의 결과에 따르면 미국 상원과 하원 의원 선거에서 추문에 연관된 후보자들은 그렇지 않은 후보자들에 비해서 당선가능성이 떨어진다고(Abramowitz 1988, 1991; Alford et al. 1994; Brown 2006a, 2006b; Dimock and Jacobson 1995; Peters and Welch 1980; Song 2016; Stewart 1994; Welch and Hibbing 1997). 추문에 관련된 후보자들의 당선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은 본 선거(general election) 이전에 치러지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예비선거(primary election)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부정부패와 관련된 추문에 휘말린 후보자들은 본 선거에 비해 당내 예비 선거에서 덜 걸러지는 경향이 있지만(Brown 2006a; Welch and Hibbing 1997), 예비선거에서는 추문에 휘말린 현역 의원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서 더 강한 도전자들을 만나서 선거에서 고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Hirano and Snyder 2012). 다른 나라에서도 부정부패나 추문이 선거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영국의 선거에서는 2009년 의회의 비용지출에 관련된 추문이 이와 관련된 후보자들에게 선거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Pattie and Johnston 2012; Eggers and Fisher 2011). 이렇듯 부정부패와 관련된 추문에 연루된 후보자들은 그렇지 않은 후보자들에 비해서 적은 득표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추문에 연루된 미국 의원들의 다수가 여전히 당선되기 때문에 추문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존재한다(Basinger 2013; Brown 2006a; Peters and Welch 1980; Welch and Hibbing 1997).

기존의 한국 선거 연구들은 지역주의와 정당일체감, 이념과 세대 등을 중요한 변수로 삼아서 분석하는 경향이 두드러졌고, 이에 비하면 후보자의 자질이 유권자들의 투표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드물다고 할 수 있다(강원택 2003, 2010; 박원호 2012; 이갑윤 1998, 2011; 이내영·정한울 2013; 장승진 2015; 허석재 2014). 1987년 민주화 이전에는 한국 선거 연구에서 정당보다는 후보자 요인, 정확히 이야기 하면 ‘인물투표’에 대한 관심이 투표결정 요인으로 주목을 받았다(길승흠 1993; 길승흠 외 1987). 예를 들어, 1963년 선거에서 인물을 보고 투표했다는 응답이 66퍼센트, 1973년 선거에서는 55퍼센트, 1985년 선거에서는 46퍼센트에 달한다(길승흠 외 1987). 민주화 이전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인물 중심의 투표는 점점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유권자들이 한국의 전통문화인 학연, 지연 등 연고주의에 기반해서 투표하다가 1970~1980년대 박정희-전두환 군사정부 시기를 거치면서 점차 민주-반민주 구도 하에서 정당에 비중을 두고 투표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민주화 이후,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와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뚜렷한 지역 구도를 드러냈던 것이 보통 지역주의 투표의 시초로 학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인물투표에 대한 논의들은 사실상 연고주의에 대한 것이고 후보자의 자질이 유권자들의 투표선택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한 것은 아니었다.

후보자의 자질이 한국 선거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은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정보공개가 명시화된 것과 더불어 시민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이 주목을 받게 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총선 시민연대의 후보자 낙천-낙선운동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큰 관심을 받게 되면서, 낙선운동의 효과가 과연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이갑윤·이현우 2000; 안문석·황민섭 2002; 윤종빈 2002; 조기숙·김선웅 2002). 낙선운동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대체로 후보자가 낙선대상인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이와 연관해서 후보자의 자질을 다룬 연구들이 소수 존재한다. 이갑윤과 이현우

의 연구는 선거에서 후보자 요인에 관한 선구적인 연구이지만, 후보자 정보공개 항목인 병역, 전과, 재산, 납세실적 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이갑윤·이현우 2000), 안문석과 황민섭은 후보자 정보공개 항목인 전과, 병역, 재산, 납세실적과 같은 요인은 선거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안문석·황민섭 2002). 조기숙과 김선웅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정보공개 항목인 병역과 납세실적을 검토했지만 해당 변수들이 지역구들 사이의 투표율의 차이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고 보았다(조기숙·김선웅 2002).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계속되었고 낙선운동의 효과에 대한 후속연구도 있었지만(김영태 2004), 이후 대법원에서 낙선운동이 위법으로 판결나면서 다시 이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지게 되었다. 그 이후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연구들을 소개하자면, 김석우의 연구는 제17대 총선에서 후보자의 개인적 특성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서 병역과 전과 기록을 통제변수로 활용했는데 둘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김석우 2006),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분석한 박명호와 김민선의 연구는 현역의원의 개인적 자질이 정치적 경쟁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면서 현역의원의 병역, 납세, 전과 기록은 선거구의 정치적 경쟁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박명호·김민선 2009).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연구에서도 후보자의 도덕성을 나타내는 전과, 세금 체납 여부는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이선중 2012). 하지만 신두철의 연구에 의하면 후보자의 정보공개는 도덕성과 관련된 점이 부각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2006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10명 중 6명 이상이 지지후보 결정에 있어서 후보자의 정보공개에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신두철 2007). 이렇듯 한국 선거에서 후보자의 자질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드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후보자의 자질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 III. 자료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후보자의 전과 기록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선거 결과를 지역구-후보자 단위에서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비례대표 후보자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는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은 2004년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로 정당투표를 통해서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과는 과정과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또한 선거 기간에 유권자들에게 제공되는 선거공보 자료를 이용하여 후보자들의 전과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후보자들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후보자 명부를 참고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을 지역구-후보자 수준에서 구성하였고, 그 결과 총 499개의 지역구(19대 246곳, 20대 253곳)에 출마한 총 1,835명의 후보자들(19대 902명, 20대 933명)이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sup>1)</sup>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후보자의 전과 기록은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공보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선거공보가 공개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에 의거해서 후보자의 학력, 재산, 병역, 전과, 납세 증명기록을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전과 기록 변수는 해당 후보자가 선거일 기준으로 전과 기록이 있으면 변수 값이 1, 없으면 변수 값이 0인 더미변수(dummy variable)로 코딩 했다. 하지만, 1,835명 후보자들의 전과 종류는 100여 가지에 이를 정도로 매우 다양한데, 이것들을 단순히 동등한 범주로 취급하기 보다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부패 범죄인 횡령, 배임죄와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 시절에 민주화 운동에 참가하여 공안사범으로 체포되어 국가보안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전과를 유권자들이 과연 동등한 죄질의 범주로 취급할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소위 386세대를 비롯한 많은 정치인들은 권위주의 독재정권 시절에 자신이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다는 사실을 유권자에게 적극 홍보할 정도로 이러한 경험을 정치적 자산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것은 많은 유권자들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사상구 선거구에 출마한 문재인 후보의 경우가 이러한 본 연구의 관점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후보가 경희대학교에 재학하던 중이던 1975년에 박정희 대통령 유신 독재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하다가

1)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후보자는 총 934명이지만, 경상남도 통영시·고성군 선거구에서는 새누리당 이균현 후보만 단독으로 후보등록을 해서 무투표 당선되었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933명만을 대상으로 했다.

구속되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전과 기록은 이후 그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창립멤버를 시작으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그의 경력에 흠집으로 작용하지 않았으며, 그는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통합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될 정도의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또 다른 대표적 사례로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서대문갑 선거구에 출마한 이상호 후보를 들 수 있다. 이상호 후보는 1987년 6월 민주항쟁 시기에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서 이한열 열사 장례식 중 시위를 주도하다가 구속되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1988년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그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를 맡을 정도로 한국 정치에서 386세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성장했으며, 따라서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시기에 학생시위를 주도하면서 얻게 된 전과 기록이 그의 정치인으로서의 성장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부패 범죄 관련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선거구에 자유선진당 소속으로 출마한 성완중 후보를 들 수 있다. 성완중 후보의 경우에는 2002년 제3대 지방선거 당시 자유민주연합 총재 특보를 맡고 있었는데, 하도급 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던 대아건설의 자금 16억 원을 빼돌려 자유민주연합에 불법 기부한 혐의에 대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또한 2002년 행담도 개발사업 과정에서 행담도 개발 측에 회사자금 120억 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배임중재죄를 적용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그는 지난 2015년 해외 자원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이른바 ‘성완중 리스트’를 남기고 자살하면서 정치권 부정부패의 치부를 상징하는 인물로 남게 되었다. 또 다른 부패 범죄 관련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 사례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라북도 전주시갑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유종근 후보를 들 수 있다. 유종근 후보는 전라북도 도지사로 재직하던 1997년 당시에 세풍그룹의 F1 그랑프리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 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풍그룹으로부터 4억 원을 받은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해서 2005년 대법원이 징역 5년, 추징금 3억 원으로 확정 판결을 내렸다. 그는 1995년 제1대 지방선거에서 전라북도 도지사에 당선되어 연임하였고 2002

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설 정도로 유망한 정치인이었지만, 이후 정치인으로 재기에 성공하지 못했으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했다. 이렇게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문재인 후보, 이상호 후보와 뇌물, 횡령, 배임, 정치자금법 등 부패 범죄를 저지른 성완중, 유종근 후보를 같은 범주의 정치인으로 유권자들이 바라보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과 변수를 민주화 운동과 관련되어 생긴 전과 기록을 제외한 모든 전과 기록으로 좁혀서 정의하며, 구체적으로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계엄법, 반공법, 긴급조치, 소요죄를 제외한 전과 기록을 변수값 1로 코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제19대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1,835명의 후보들 중에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는 전체의 약 18퍼센트인 329명이고, 이 중 약 83퍼센트(273명)의 후보자가 낙선하였다. <표 1>은 본 연구에 포함된 전과 기록의 유형을 보여준다.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이는 전과 유형은 음주운전이지만,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될 수 있는 선거법, 뇌물, 배임, 횡령 등의 전과 기록도 비교적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다.<sup>2)</sup>

본 연구는 전과 기록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회귀분석 모형을 사용하였다.

$$Y_{ist} = \alpha_s + \theta_t + \beta \text{전과}_{it} + \delta X_{it} + \varepsilon_{ist}$$

위 모형에서 아래첨자  $i$ ,  $s$ ,  $t$ 는 각각 후보자, 시도, 해당연도를 표시한다.  $Y_{ist}$ 는 종속변수로서 본 연구에서는 선거승리 더미변수와 득표율(%)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

2)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유권자들이 이처럼 다양한 전과 기록들을 모두 동등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전과 기록들의 심각성 정도를 객관적으로 코딩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민주화 운동과 관련되지 않은 모든 범죄 기록을 1로 코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값은 다양한 전과 기록의 평균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전과 기록의 개수를 구분하지 않았다. 만약, 전과 기록의 개수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이는 전과 기록이 0에서 1로 변화할 때와 2에서 3으로 변화할 때의 효과가 같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과 기록 유무를 더미 변수로 코딩함으로써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자들과 그렇지 않은 후보자들 간의 평균적인 차이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표 1〉 전과 유형

전과 종류	건수	전과 종류	건수
음주운전	89	명예훼손	8
선거법	56	무면허	7
폭행	31	배임	6
공무집행방해	24	사문서위조	5
업무방해	18	교통사고처리	5
건축법	13	노조법	5
뇌물	13	횡령	5
정치자금법	12	무고	5
상해	9	근로기분법	5
사기	9	알선수재	5
기타	99		

다.<sup>3)</sup> 시도 고정 효과(fixed effect)인  $\alpha_i$ 는 시도 수준의 관측 가능한(observable) 특성 들뿐만 아니라 관측 불가능한(unobservable) 특성들까지도 통제함으로써 시도의 특 성이 독립변수의 측정치를 왜곡할 가능성을 방지한다. 지역주의가 선거 결과에 미치 는 영향이 상당한 한국 선거의 특성상 시도 고정 효과는 모형에 꼭 포함되어야 할 변 수인 것으로 연구자는 판단했다. 연도 고정 효과인  $\theta_t$ 는 선거 해당 연도의 특성을 통 제하기 위해서 포함되었다.  $X_{it}$ 는 후보자 수준의 통제 변수 벡터(vector)로서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새누리당, 민주당, 무소속, 남성, 현직, 현직 경험, 연령.<sup>4)</sup> 후보자 수준의 통제 변수는 후보자의 특성이 전과 여부와 선거 결과에 동시에 영향 을 미쳐서 측정치를 왜곡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varepsilon_{it}$ 는 오차항(error term)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전과 기록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beta$ 로 측정된다. 전과 기록이

- 3) 선거 승리 더미 변수는 해당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하면 1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의 값을 갖도록 코딩했다. 득표율은 후보자의 득표수를 후보자가 속한 지역구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의 총득표수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수이다.
- 4) 이 중 연령을 제외한 변수는 모두 더미 변수이다. 민주당은 제19대 총선의 경우 민주통합 당을, 제20대 총선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을 의미한다. 현직 경험 변수는 해당 후보자가 당 해 선거 이전에 한 번이라도 국회의원에 당선된 적이 있는 경우 1의 값을 갖는다.

〈표 2〉 기술 통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사레수
전과	0.179	0.384	0	1	1,835
새누리당	0.260	0.439	0	1	1,835
민주당	0.241	0.428	0	1	1,835
무소속	0.204	0.403	0	1	1,835
남성	0.912	0.283	0	1	1,835
나이	53.659	8.620	25	82	1,835
현직	0.169	0.375	0	1	1,835
현직 경험	0.356	0.733	0	6	1,835
승리	0.271	0.445	0	1	1,835
득표율(%)	27.139	20.447	0	83	1,835
비례 득표율(%)	28.698	17.248	0	76	1,389

후보자의 선거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beta$ 의 측정값은 음수가 될 것이다.<sup>5)</sup> 본 모형을 측정할 때는 오차항의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을 고려한 강건 표준 오차(robust standard errors)를 사용하였으며, 시도 고정 효과를 포함한 모형에서는 시도 단위에서의 군집을 고려한 표준 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를 사용하였다. 〈표 2〉는 각 변수의 기술 통계를 보여준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는 성향 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이용하여 전과 여부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자들과 전과 기록이 없는 후보자들이 여러 가지 특성에서 다르다면 전과 기록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두 집단의 득표율이나 당선율을 단순히 비교할 수 없다. 두 집단 간의 득표율/당선율의 차이가 두 집단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인지, 전과 기록 유무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직 여부가 전과 기록 유무 및 당선 여부와 모두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전과 기록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의 측정값은 왜곡될 것이다. 현직 경험이 없는 사람이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고 현직이 선거 결과에 긍정적인(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전과 기록이

5) 본 연구에서는 선거 승리 더미 변수를 종속 변수로 사용한 경우 변수의 해석이 용이한 선형 확률 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을 사용하였다. 로짓 모형(logit model)이나 프로빗 모형(probit model)을 사용해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표 3〉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

변수	(a) 전체 표본		(b) 매칭 후 표본	
	실험군	대조군	실험군	대조군
새누리당	0.240	0.264	0.240	0.210
민주당	0.167***	0.258***	0.167	0.182
무소속	0.225	0.199	0.225	0.213
남성	0.957***	0.902***	0.957	0.967
나이	55.48***	53.261***	55.480	54.432
현직	0.109***	0.183***	0.109	0.119
현직 경험	0.219***	0.386***	0.219	0.182
사례수	329	1,506	329	329

\*\*\*로 표시된 부분은 해당 변수의 차이가 0.01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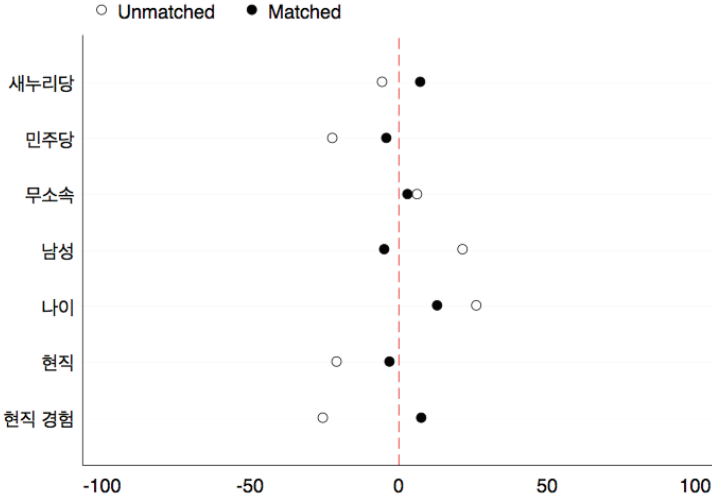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음의 방향으로 과대(과소) 평가 될 것이다.

〈표 3〉의 (a)는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들(실험군)과 전과 기록이 없는 후보들(대조군)의 특성을 보여준다. 표에서 나타나듯이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들과 전과 기록이 없는 후보자들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난다. 두 집단의 평균 비교 분석 결과에 의하면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들은 대조군에 비해서 민주당에 소속될 가능성이 낮고, 남성일 가능성이 높으며, 나이가 많고, 현직일 가능성이 낮고, 현직 경험이 적다. 본 연구에서는 후보자들의 관측 가능한 특성들을 이용하여 성향 점수 매칭 방법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을 매칭 하였다(Rosenbaum and Rubin 1983).<sup>6)</sup> 매칭을 통해서 후보자들의 특성이 비슷한 실험군과 대조군을 추출할 수가 있었다. 〈표 3〉의 (b)에서 보듯이 매칭 후에는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들과 전과 기록이 없는 후보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즉, 매칭 후 실험군과 대조군에 속한 후보들은 전과 유무에서만 차이가 나고 나머지 특성은 비슷하다.

〈그림 1〉은 매칭 전후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후보자 특성 변수의 표준화된 차이(standardized differences)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sup>7)</sup> 매칭 후에 실험군과 대조군의 특

6) 매칭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논의는 섉훈(Sekhon)의 연구를 참조(Sekhon 2009). 본 연구에서는 매칭을 하기 위해서 통계프로그램인 Stata의 psmatch2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였다.

7) 표준화된 차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d = \frac{\bar{x}_t - \bar{x}_c}{\sqrt{\frac{s_t^2 + s_c^2}{2}}}$ . 이 수식에서 아래첨자  $t$ 와  $c$ 는



〈그림 1〉 매칭 전후 공변량(covariate)의 표준화된 차이

성이 유사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매칭된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득표율과 선거 승리 확률을 비교함으로써 전과 기록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실험군과 대조군의 득표율과 선거 승리 확률을 단순 비교한다면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실험군의 특성 때문인지 전과 기록 유무 때문인지를 알기가 어렵다. 앞서 <표 3>의 (a)에서 드러난 것처럼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자들과 그렇지 않은 후보자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기 때문이다. 반면, 매칭된 이후에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특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두 집단의 종속 변수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전과 기록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적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sup>8)</sup>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구 수준에서의 정상투표(normal vote), 즉 정당 지지 성향을 통제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에서의 정당 득표를 사용하였다. 정상투표란 미국 선거 연구에서 제시된 개념으로써 유권자들의 정당 선호가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경우 기대되는 수준의 득표(baseline vote)를 의미한다.<sup>9)</sup> 미국 선거를 분석하는 기준

각각 실험군과 대조군을 의미하고  $\bar{x}$ 는 평균을,  $s^2$ 은 분산을 의미한다.

8) 물론, 매칭 이후에도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관측 불가능한(unobservable)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9) 컨버스(Converse)의 기념비적인 연구를 참조(Converse 1966).

연구에서는 주로 시차 득표(lagged vote share)를 이용하거나 분석 단위 수준의 고정 효과를 이용하여 정당 지지 성향을 통제한다.<sup>10)</sup> 한국 선거에서는 박원호가 이를 ‘표준정당충성도’라는 용어로 표현하였으며, 이전 4번의 선거 결과를 가지고 측정하였다(박원호 2009).

본 연구에서는 비례대표에서의 정당 득표를 이용하여 지역구의 정당 지지 성향(정상투표)을 측정하고자 한다. 한국에서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 정당 득표를 사용하여 유권자들의 정당 지지 성향을 통제할 수 있다. 비례대표에서의 정당 득표를 이용하여 정상투표를 통제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기존 외국 문헌에서 사용되는 방법들을 한국 선거 분석에 적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다. 첫째로,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보통 2개 이상의 정당이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지역 고정 효과를 사용하여 정상투표를 통제하기가 어렵다. 미국과 같은 양당제의 선거를 분석할 때는 종속 변수가 보통 한 정당의 득표율이 되기 때문에<sup>11)</sup> 지역 고정 효과를 포함함으로써 각 지역에서 기준 정당을 지지하는 정도를 통제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처럼 다당제 하에서의 선거를 분석할 때는 지역 고정 효과가 각 정당에 대한 지지 성향을 모두 통제해 주지 못한다. 둘째로, 시차 득표(lagged vote share) 변수는 해당 지역의 정당 지지 성향뿐만 아니라 특정 선거에서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단기효과(short-term effect)를 포함한다는 문제를 지닌다(Ansolabehere and Snyder 2002). 마지막으로, 이전에 치러진 몇 차례의 선거 결과를 이용하여 정당 지지 성향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단기효과를 어느 정도 배제할 수 있으나,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한 두 개의 선거로 제한된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매년 지역구의 변동이 조금씩 일어나는 선거를 분석할 때 시차 득표 변수나 과거 몇 차례의 선거 결과로 정당 지지 성향을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지역의 단위를 재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한국처럼 정당체제가 안정적이지 않아서 선거 때마다 정당들이 이합집산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10) 앤솔라베허(Ansolabehere)와 스나이더(Snyder)의 연구를 참조(Ansolabehere and Snyder 2002).

11) 민주당 득표율이 종속변수로 사용되는 경우 종속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text{민주당 득표율} = \frac{\text{민주당 득표수}}{\text{민주당 득표수} + \text{공화당 득표수}}$$

이전 선거들을 이용하여 유권자들의 정당 지지 성향을 측정하기가 어렵다. 애초에 정상투표(normal vote)의 개념이 정당체제가 매우 안정적인 미국의 정치제도를 분석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을 한국 선거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비례대표의 정당 득표는 지역구 수준에서 각 정당 별로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선거구가 재조정되거나 정당들이 선거를 앞두고 합당/분당한 경우에도 비례대표의 정당 득표를 이용하여 정당 지지 성향을 측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유권자들이 사표방지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투표(sophisticated voting)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비례대표의 정당 득표는 유권자들의 정당 지지 성향을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무소속 후보나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는 군소정당이 분석에서 제외된다는 단점이 있겠으나, 주요 정당의 후보자들은 모두 분석에 포함시킬 수 있다.<sup>12)</sup>

#### IV. 결과

〈표 4〉는 전과 기록이 후보자의 당락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1)번 모형은 기본 모형의 측정값을 보여주었고 (2)번 모형은 시도 고정 효과를 포함했을 때의 측정값을 보여준다. 두 모형에서 모두 후보자들의 전과 기록은 당락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 결과에 의하면,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들은 그렇지 않은 후보자들에 비해서 선거에서 떨어질 확률이 약 5.6퍼센트 정도 높다.

〈표 5〉는 득표율을 종속변수로 삼은 모형의 측정 결과를 보여준다. (1)번과 (2)번 모형은 종속변수를 제외하면 〈표 4〉의 모형과 같고 (3)번과 (4)번 모형은 지역구 유권자들의 정당 지지 성향을 통제하기 위해 비례대표 득표율을 추가로 포함하였다.<sup>13)</sup>

12) 본 연구에서는 비례 대표 득표율을 포함한 모형과 그렇지 않은 모형의 결과를 모두 제시한다. 두 모형 모두에서 전과 기록은 선거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비례대표 득표율을 포함한 경우 무소속과 비례 대표 후보를 내지 않은 군소 정당이 분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3)번과 (4)번의 사례수가 (1)번과 (2)번의 사례수보다 적다. 또한

〈표 4〉 전과 기록이 선거 승리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 선거승리	
	(1)	(2)
전과	<b>-0.056***</b> <b>(0.021)</b>	<b>-0.056**</b> <b>(0.023)</b>
새누리당	0.305*** (0.026)	0.302*** (0.067)
민주당	0.332*** (0.026)	0.331*** (0.082)
무소속	-0.046*** (0.015)	-0.055* (0.029)
남성	-0.023 (0.032)	-0.025 (0.052)
나이	0.001 (0.001)	0.001 (0.001)
현직	0.334*** (0.038)	0.329*** (0.060)
현직 경험	0.033* (0.020)	0.038** (0.015)
고정 효과	연도	연도, 시도
사례수	1,835	1,835
$R^2$	0.336	0.338

주: 괄호 안은 강건 표준 오차(Robust Standard Error). (2)번 모형의 표준 오차는 시도 수준에서 군집되어 있음. 모든 모형에 후보자 수준의 통제변수들이 포함되어 있음.

\*  $p < 0.1$ , \*\*  $p < 0.05$ , \*\*\*  $p < 0.01$ .

〈표 5〉은 모든 모형에서 전과 기록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번과 (2)번의 모형에서는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는 전과 기록이 없는 후보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 4.1~4.2퍼센트 정도의 표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례 득표

(3)번과 (4)번의 모형에서는 무소속 후보들이 분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무소속 변수가 제외되었다.

〈표 5〉 전과 기록이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 득표율(%)			
	(1)	(2)	(3)	(4)
전과	<b>-4.147***</b> <b>(0.798)</b>	<b>-4.212***</b> <b>(0.814)</b>	<b>-2.350***</b> <b>(0.587)</b>	<b>-2.534***</b> <b>(0.587)</b>
새누리당	25.139*** (0.927)	24.680*** (3.712)	8.364*** (0.808)	8.111*** (0.790)
민주당	25.620*** (0.835)	25.392*** (2.958)	13.545*** (0.704)	13.404*** (0.708)
무소속	-1.816** (0.876)	-2.348 (1.701)		
남성	0.202 (1.012)	0.084 (1.498)	-1.183 (0.970)	-0.902 (0.964)
나이	0.133*** (0.035)	0.135*** (0.037)	-0.010 (0.027)	-0.001 (0.028)
현직	10.788*** (1.050)	10.343*** (2.191)	5.240*** (0.688)	5.306*** (0.706)
현직 경험	2.502*** (0.537)	2.794*** (0.464)	1.194*** (0.362)	0.974** (0.382)
비례득표			0.738*** (0.022)	0.747*** (0.021)
고정 효과	연도	연도, 시도	연도	연도, 시도
비례 득표 통제			통제	통제
사례수	1,835	1,835	1,389	1,389
$R^2$	0.621	0.627	0.812	0.819

주: 괄호 안은 강건 표준 오차(Robust Standard Error). (2)번과 (4)번 모형의 표준 오차는 시도 수준에서 군집되어 있음. 모든 모형에 후보자 수준의 통제변수들이 포함되어 있음.

\*  $p < 0.1$ , \*\*  $p < 0.05$ , \*\*\*  $p < 0.01$ .

를 통제했을 때는 전과 기록 계수의 측정치가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과 기록의 효과는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자들의 득표는 약 2.3~2.5퍼센트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전과 기록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 성향 점수 매칭법

종속변수	실험군	대조군	실험군에 대한 평균 처리 효과	표준오차	t-값
선거 승리	0.170	0.237	-0.067	0.027	<b>-4.58***</b>
득표율(%)	20.622	24.567	-7.940	1.231	<b>-6.45***</b>

\* p<0.1, \*\* p<0.05, \*\*\* p<0.01.

마지막으로, 〈표 6〉은 성향 점수 매칭법에 의한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매칭된 표본에서 실험군에 속한 후보들(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들)이 선거에서 승리할 확률은 약 17퍼센트이고 대조군에 속한 후보들(전과 기록이 없는 후보들)이 선거에서 승리할 확률은 약 23.7퍼센트이다. 양 집단의 차이, 즉 실험군에 대한 평균 처리 효과(Average Effect on the Treated, ATT)는 약 6.7퍼센트이고 이 차이는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득표율을 종속변수로 했을 때 전과 기록의 효과는 약 7.9퍼센트 정도로 측정되었다. 전반적으로 성향 점수 매칭법에 의한 측정치가 회귀분석의 측정치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장의 결과를 정리하자면, 후보자들의 전과 기록은 당선 확률을 약 5.6~6.7퍼센트 가량 낮추고 후보자의 득표율을 약 2.3~7.9퍼센트 정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9대와 제20대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들은 총 329명이다. 측정 결과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18~22명의 후보자가 전과 기록에 의해서 낙선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329 \times 0.056$  혹은  $329 \times 0.067$ ). 또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 전체 246개의 의석 중 22개의 의석이 2.5 퍼센트 이내의 표차로 결정되었으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 전체 253개의 의석 중 31개의 의석이 2.5퍼센트 이내의 표차로 결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과 기록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처럼 제1당과 제2당의 의석 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후보자들의 전과 기록이 원내 정당의 의석 분포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성향 점수 매칭법에 의한 측정치를 사용하는 경우, 전과 기록이 선거 결과에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컸다. 제19대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 중 약 34퍼센트의 의석(84석)이, 제20대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 중 약 40퍼센트의 의석(101석)이 7.9퍼센트 이내의 표차로 결정되었다.

## V.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후보자들의 전과 기록이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들은 그렇지 않은 후보자들에 비해서 선거에서 당선될 확률이 낮으며 더 적게 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 기록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선거 이후 원내 정당의 권력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큰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지난 두 차례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자질을 고려해서 투표 선택을 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앞으로 한국 선거 연구가 후보자의 자질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후보자의 특성, 특히 전과 기록처럼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특성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몇 가지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로,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유권자들이 선거 출마 후보자들의 자질을 고려한다면, 향후 정당들의 후보 공천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미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예비후보 등록에서도 후보자 정보공개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예비후보 출마단계에서 드러난 공천 신청자의 전과 기록이 정당의 후보공천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후보자들의 전과 기록이 각 정당의 후보 공천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흥미로운 후속 연구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것처럼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전과 기록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면 각 정당들은 공천 과정에서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후보자들을 공천에서 배제함으로써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역주의의 영향이 강한 한국 선거의 특성상 각 정당들이 선거에서 쉽게 이길 수 있는 지역에서는 공천을 통해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자들을 걸러낼 유인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그리고 지방선거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화 되는 대통령 선거보다는 지방선거에서 전과 기록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중앙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분석 대상을 삼았지만, 유권자들이

지역의 일꾼인 기초 단체장에게 국회의원 후보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요구하는지 혹은 지역을 위해 봉사할 정치인을 선출하기 위해 도덕적인 결함을 덮어주는 경향이 있는지를 분석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또한 광역/기초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한국 지방선거의 특성상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모든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고루 얻기가 힘들다. 따라서 선거 기간 언론의 주목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기초의회 의원이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전과 기록의 효과가 국회의원 선거에서처럼 나타날 수 있는지도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과 기록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만을 분석하였으나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유권자들이 부정부패에 연루된 정치인들을 선거에서 심판하는 지의 여부는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정당 지지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은 지지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를 눈감아 주는 경향이 있다(Eggers 2014). 또한 유권자들이 언론을 통해서 부정부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정부패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Chang et al. 2010; Costas-Pérez et al. 2012; Song 2016). 이러한 점에서 한국 언론의 보도 행태와 유권자들의 특성은 전과 기록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매개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흥미로운 후속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언론이 특정 정당 후보들의 전과 기록을 편향되게 다루는지, 만약 그렇다면 언론의 보도 편향(bias)이 전과 기록과 선거 결과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전과 기록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집합자료(aggregate data)를 사용하였으나, 설문자료(survey data)를 이용하여 유권자들의 특성이 후보자들의 자질과 후보자들에 대한 평가 및 투표 선택을 어떻게 매개하는지를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투고일: 2016년 8월 22일

심사일: 2016년 9월 22일

게재확정일: 2016년 10월 2일

## 참고문헌

- 강원택. 2003. 『한국의 선거 정치: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 서울: 푸른길.
- \_\_\_\_\_. 2010. 『한국 선거정치의 변화와 지속: 이념, 이슈, 캠페인과 투표참여』. 파주: 나남.
- 길승흠. 1993. “한국인의 정치의식구조변화: 1963~1993년.” 『한국정치학회보』 26집 3호, 133-52.
- 길승흠·김광웅·안병만. 1987. 『한국선거론』. 서울: 다산출판사.
- 김석우. 2006. “17대 총선과 정치적 충원: 당선자 결정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7집 2호, 287-315.
- 김영태. 2004. “시민운동과 17대 국회의원 선거: 낙선운동의 효과를 중심으로.” 『사회연구』 8호, 129-47.
- 박명호·김민선. 2009. “후보자 요인, 현직 효과 그리고 정치적 경쟁.” 『정치정보연구』 12집 1호, 165-79.
- 박원호. 2009. “부동산 가격 변동과 2000년대의 한국 선거: 지역주의 “이후”의 경제투표에 대한 방법론적 탐색.” 『한국정치연구』 18집 3호, 1-28.
- \_\_\_\_\_. 2012. “세대균열의 진화: ‘386세대’의 소멸과 30대 유권자의 부상.” 박찬욱, 김지윤·우정엽 편. 『한국 유권자의 선택 1: 2012 총선』, 186-217.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 신두철. 2007. “5·31 지방선거의 특징과 선거캠페인.” 『한국정당학회보』 6집 1호, 55-78.
- 안문석·황민섭. 2002. “시민단체의 공직후보 낙선운동의 영향력 평가: 16대 총선에서의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1집 2호, 227-53.
- 윤종빈. 2002. “16대 총선에서 나타난 현직의원의 득표율증감 분석: 지역구활동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5집 4호, 129-46.
- 이갑윤. 1998. 『한국의 선거와 지역주의』. 서울: 오름.
- \_\_\_\_\_. 2011. 『한국인의 투표 행태』. 서울: 후마니타스.
- 이갑윤·이현우. 2000.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요인의 영향력: 14~16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4집 2호, 149-70.
- 이내영·정한울. 2013. “세대요인이 18대 대선 결과에 미친 영향: 세대별 투표행태와 구성 효과를 중심으로.” 이내영·서현진 편.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5: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12 총선과 대선』, 101-31.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 이선중. 2012. “공직선거 후보자의 청렴성은 유권자들의 선택(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 가?: 19대 총선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17집 4호, 39-59.
- 장승진. 2015.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과 투표행태: 정당 편향 유권자의 특성과 투표 선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4집 2호, 25-52.
- 조기숙·김선웅. 2002.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이 16대 총선 투표율을 낮추었나?” 『한국정치학회보』 36집 1호, 163-83.
- 허석재. 2014. “한국에서 정당일체감의 변화.” 『한국정당학회보』 13집 1호, 65-93.
- Abramowitz, Alan I. 1988. “Explaining Senate Election Outcom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2. No. 2, 385-403.
- \_\_\_\_\_. 1991. “Incumbency, Campaign Spending, and the Decline of Competition in U.S. House Elections.” *Journal of Politics* 53. No. 1, 34-56.
- Alford, John, Holly Teeters, Daniel S. Ward, and Rick K. Wilson. 1994. “Overdraft: The Political Cost of Congressional Malfeasance.” *Journal of Politics* 56. No. 3, 788-801.
- Ansolabehere, Stephen, and James M. Snyder. 2002. “The Incumbency Advantage in U.S. Elections: An Analysis of State and Federal Offices, 1942–2000.” *Election Law Journal: Rules, Politics, and Policy* 1. No. 3, 315-38.
- Basinger, Scott J. 2013. “Scandals and Congressional Elections in the Post-Watergate Era.”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66. No. 2, 385-98.
- Brown, Lara M. 2006a. “It’s Good to Be an Incumbent: Scandals, Corruption, and the 2006 Midterm Election.” Working Paper.
- \_\_\_\_\_. 2006b. “Revisiting the Character of Congress: Scandals in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1966-2002.” *Journal of Political Marketing* 5, No. 1-2, 149-72.
- Chang, Eric C. C., Miriam A. Golden, and Seth J. Hill. 2010. “Legislative Malfeasance and Political Accountability.” *World Politics* 62. No. 2, 177-220.
- Converse, Philip E. 1966. “The Concept of a Normal Vote.” A. Campbell, P. E. Converse, W. E. Miller and D. E. Stokes, eds. *Elections and the political order*, 9-39. Wiley: New York.
- Costas-Pérez, Elena, Albert Solé-Ollé, and Pilar Sorribas-Navarro. 2012. “Corruption Scandals, Voter Information, and Accountability.”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8. No. 4, 469-84.
- Dimock, Michael A., and Gary C. Jacobson. 1995. “Checks and Choices: The House Bank Scandal's Impact on Voters in 1992.” *Journal of Politics* 57. No. 4, 1143-59.
- Eggers, Andrew C. 2014. “Partisanship and Electoral Accountability: Evidence from the

- UK Expenses Scandal.” *Quarterly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9. No. 4, 441-72.
- Eggers, Andrew C., and Alexander C. Fisher. 2011. “Electoral Accountability and the UK Parliamentary Expenses Scandal: Did Voters Punish Corrupt MPs?” Working Paper.
- Hirano, Shigeo, and James M. Snyder. 2012. “What Happens to Incumbents in Scandals?” *Quarterly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7. No. 4, 447-56.
- Pattie, Charles, and Ron Johnston. 2012. “The Electoral Impact of the UK 2009 MPs' Expenses Scandal.” *Political Studies* 60. No. 4, 730-50.
- Peters, John G., and Susan Welch. 1980. “The Effects of Charges of Corruption on Voting Behavior in Congressional Elec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4. No. 3, 697-708.
- Rosenbaum, Paul R., and Donald B. Rubin. 1983. “The Central Role of the Propensity Score in Observational Studies for Causal Effects.” *Biometrika* 70. No. 1, 41-55.
- Sekhon, Jasjeet S. 2009. “Opiates for the Matches: Matching Methods for Causal Inference.”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2. No. 1, 487-508.
- Song, B. K. 2016. “Media Markets and Politicians Involved in Scandals.” *Social Science Journal* 53, No. 4, 389-97.
- Stewart, Charles. 1994. “Let’s Go Fly a Kite: Correlates of Involvement in the House Bank Scandal.”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19. No. 4, 521-35.
- Welch, Susan, and John R. Hibbing. 1997. “The Effects of Charges of Corruption on Voting Behavior in Congressional Elections, 1982–1990.” *Journal of Politics* 59. No. 1, 226-39.

ABSTRACT

---

The Effect of Candidates' Criminal Records on  
Election Results:  
Evidence from the 19th and 20th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s

**B.K. Song** | Hanyang University

**Jisung Yoon** |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paper, we study whether voters in South Korea punish candidates for their past wrongdoings. Specifically, we analyze the effect of candidates' criminal records on election results using data from the 19th and 20th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s. Our estimates indicate that, on average, candidates with criminal records are 5.6 to 6.7 percent less likely to be elected and receive 2.3 to 7.9 percent less vote share than other candidates. Unlike previous studies, our findings suggest that voters in South Korea make their vote choices based on candidates' quality.

**Keywords:** congressional election, candidate information disclosure, criminal record, candidate quality, vote choice